
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· 따뜻한 금융</li> <li>· 튼튼한 금융</li> </ul>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	
책 임 자	김홍식 단장(2156-3300)	담 당 자	윤송이 사무관(2156-3334)
배 포 일	2015.12.22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

## 제 목 : 증권사 블록딜 및 자선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(금융위 간담회 개최)

- 블록딜 연관 알선수재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조치 강구
- 불법 자선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업계 의견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
-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

### I. 간담회 개최 배경

- 자본시장조사단은 12월 22일(화)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
  - 참석 대상 : 금융위원회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,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(약21명)
-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 및 자선거래가 적발되어 구속기소된 바 있어,
  -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
- 아울러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를 공유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 논의

## II. 블록딜 연관 알선수재 및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방안

### 1 검토 배경 및 업계 현황

- (검토배경) 검찰은 블록딜 연관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하고, 임직원을 구속(15.10월, 12월)
  - 블록딜 관련 알선수재는 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경우와 ②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급매할 주식의 매매 등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경우로 구분

#### 블록딜 제도

- (개요) 주가급등락 등 대량매매에 의한 시장충격을 없애기 위해 양방이 협의를 거쳐 원하는 가격으로 별도 체결라인(K-Blox)을 통해 매매

거래대상	주권, DR(주식예탁증서), ETF
체결가격	매수·매도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
시장구분	장개시전(8:00~9:00), 장중(9:00~15:00), 장종료후(15:00~18:00)
호가범위	(장 중) 호가제출 직전 최저~최고가 이내 (시간외)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(±30%)
매매수량	(코스피) 5,000주 또는 1억원 이상 (코스닥) 1억원 이상

\* 장중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락으로부터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'96년 최초 도입 이후 매매요건 및 가격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확대시행 중에 있음

- (업계현황) 최근 2~3년간 블록딜 거래 규모는 연간 25~30조원 수준(전체 거래대금 대비 2% 수준)이며, 올해 11월까지 23.7조원(총 20,863건, 건당 평균 11억원)이 거래
  - 대규모 지분을 일반 거래로 매도(매수) 할 때 보다, 높은(낮은) 가격에 매도(매수)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
  -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, 신속하게 지분을 매도(매수)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

#### <연간 블록딜 거래현황>

(단위:억원 (건))

구 분	코스피	코스닥	전체
2013년	227,437 (21,144)	23,756 (4,585)	251,193 (25,729)
2014년	281,918 (22,251)	30,224 (4,060)	312,143 (26,311)
2015.1월~11월	206,917 (16,725)	30,498 (4,138)	237,415 (20,863)

- 기준가격 대비 **평균 1.6% 할인한 가격**으로 매매되며,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**당일 종가는 평균적으로 3.67% 하락하는 경향**
- ※ 증가하락은 **할인받아 매수한 물량을 즉각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고**, 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은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 등에 주로 기인
-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형 거래에 비해, 사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**소규모 거래에서 알선수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큼**

## 2 문제점

- **(알선수재에 관한 위법성 인식)** 소수직원의 **개인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**, 중개수수료 외의 **별도의 사적인 금전지급**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
- 최근 **업황이 좋지 않아 성과급\*** 외에 **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취할 개연성**이 높고,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알선수재의 경우 **위법성 인식이 미흡**
- \*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거래대금의 1%를 수수료로 수취하고, 이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개인성과급 형태로 지급

### <블록딜 연관 알선수재 사례>

- ① 증권회사 직원이 대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의 처분을 부탁받고, 기관투자자를 연결해준 대가를 수취
- ② 기관직원이 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의 처분을 부탁받고, 기관투자자를 연결해준 대가를 수취

- **(블록딜 연계 불공정거래 발생소지)** 가격 급변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는 거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**블록딜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**

### <블록딜 연계 불공정거래 사례>

- ① **(시세조종)** 특정회사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대량 블록딜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음
- ② **(미공개중요정보이용)** 악재성 미공개정보(예:부도사실 등)를 인지한 대주주 등이 블록딜을 통해 대규모 물량을 신속히 처분할 수 있음

## 3 개선 방안

**블록딜 제도 자체는 순기능이 큰 만큼 시장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**

- ① 개인비리 성격의 **알선수재** 문제는, 교육 강화 등 **다각적인 예방조치**를 취하고
- ② 각종 **불공정거래 연계 가능성**에 대해서는, 모니터링 강화 등 **적발·조사 체계를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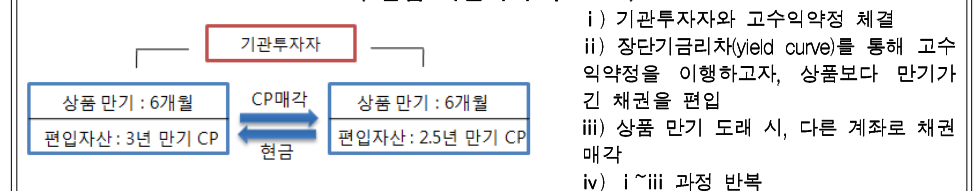
- ① **(예방교육실시)**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(최근 제재 사례 중심) 실시 검토
  -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은 알선수재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들의 **위법성 인식**이 미흡하여, 이와 같은 주의환기를 통해 상당한 예방효과 기대
- ② **(모니터링 및 조사 체계강화)** 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,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에 신속보고 체계 구축
- ③ **(내부통제강화)** 증권사 자체적으로 **모니터링을 강화**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 자체 검사 후 이에 대한 기록유지

## Ⅲ.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

### 1 검토 배경 및 업계 현황

- **(검토배경)** 검찰은 최근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수익을 약속하고, 수심조원대 **불법 자전거래**를 한 혐의로 증권회사 임직원을 기소

### < 불법 자전거래 구조도 >



- **(관련법률)**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·랩·펀드 등에 속하는 재산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와 거래할 수 없음
  - 금융투자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재산을 자신의 다른 재산과 거래하여,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

### 〈 신탁·랩·펀드 상호간 자전거래 허용 여부 〉

구 분	신탁재산	랩 재산	펀드재산
신탁재산	△(일부예외)	×	×
랩 재산	×	×	×
펀드재산	×	×	△(일부예외)

- 위반시 i) 행정벌 :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및 정직 이하,  
ii) 형사벌 :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(법 §444 8호)

□ (업계현황) 자산운용사는 검사 및 자정노력을 통해 현재 자전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,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가능

## 2 문제점

□ (과당경쟁에 따른 자전거래 유인상존) 기금의 수탁경쟁으로 인하여 예상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고, 이를 맞추기 위해 만기 미스매칭(mis-matching) 및 자전거래 발생

-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품의 만기보다 긴 장기채권을 편입하고, 상품만기를 맞아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(ABCP) 및 기업어음(CP)를 자산 운용재산에 매각

\* 금투업규정 제4-77조는 수익률을 '일정한 범위'의 형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'단일한 예시수익률'을 제시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으며, 증권사는 추가자금유치를 위해서 예시수익률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

□ (채권유통시장 미발전)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협소하고 100억원 미만의 채권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,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측면

## 3 개선 방안

□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, 사전에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관행을 개선하고자,

- (자전거래 검사 강화) 금융당국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·감독을 강화하고,
- (예시수익률 요구관행 개선) 일정기간(월·분기별 등)의 평균·최고·최저수익률 이외에 사전적·목시적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 개선방안 논의

## IV.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경각심 제고

### 1 검토 배경 및 현황

- (검토배경) 증선위가 C사의 미공개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한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('14.3월)
- 최근 H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가 또다시 적발되어 검찰에 통보되었음 ('15.10월)
- (현황) C사 사건 이후 G사, N사 사건 등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해왔으며, '15.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에 따라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가능

### 2 문제점

- (위법성 인식) C사 사건 적발 이후 처벌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부당이득을 취득한 펀드매니저에 대한 비난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,
-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
- (처벌규정의 부재) 2차 정보수령자인 펀드매니저의 행위가 '15.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불가

### 3 개선 방안

- (시장질서교란행위 경각심 제고)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함
-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